

데스크 시각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예의



박진현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미술관에 들어서자 어디선가 아이들의 유패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돌아다닌 끝에 웃음소리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다. 바로 미술관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향이었다.

그리고 보니 참 이상한, 미술관이었다. 그 흔한 그림 한 점도 눈에 띄지 않았다. 수영장을 연상케 하는 50m 길이의 레인이 건물 중앙에 자리하고 있을 뿐이었다. 다만 물이 찰랑거리는 레인 양 옆에는 각 양각색의 조각상들이 전시돼 관람객들을 맞이했다. 물이 흐르는 공간에서 예술품 감상이라니... 상상조차 못했던 진풍경에 탄성이 터져 나왔다.

2년 전에 들렀던 프랑스 루베 ‘수영장 미술관’의 풍경이다. 국내의 미술관들을 둘러볼 기회가 많았지만 ‘수영장 미술관’은 ‘들지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개념이었다. 이곳은 수영장을 리모델링한 미술관

이었던 것이다.

지난 1932년 가난한 공장 노동자들의 후생시설로 건립된 수영장은 이후 수십여 년 동안 도시의 명물로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용객이 줄어들었고 물탱크 부식으로 안전 문제까지 겹치면서 1985년 영구 폐쇄됐다.

추억의 루베 수영장 미술관

냉기가 가득한 수영장에 파스한 햇볕이 비치게 된 것은 지난 1990년대 초반. 당초 루베시 당국이 수영장 철거로 거둬들인 자금과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자 시민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유는 단 하나. 오랜 세월 시민들과 동고동락해 온 수영장을 없애는 건 그 시절의 소중한 추억과 기억을 지우는 것이라며 보존을 요구했다.

지역민들은 박제된 공간이 아닌 ‘살아 있는’ 문화유산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루베시의 역사와 수영장의 보존 가치 등을 주제로 다양한 아카이브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문화수도 릴과 파리의 문화기획자들이 루베 수영장에 주목하면서 미술관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떠올랐다.

10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 2001년 개관한 수영장 미술관은 과거와 현재

에 머물지 않고 세대를 아우르는 열린 공간을 지향한다. 미술관의 스피커를 통해 1시간 간격으로 ‘그 시절’ 아이들의 물놀이 소리를 들려 주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보스턴의 도심을 관통하는 빨간색 라인(red line)의 ‘프리덤 트레일’(Freedom Trail)도 마찬가지다. 1951년 보스턴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현장’들을 지역 브랜드로 키우자는 시민들의 제안으로 탄생한 프리덤 트레일에는 미국 독립혁명과 관련된 16개의 유적지뿐만 아니라 보스턴너인(Bostonian)들의 숨결이 스며 있는 컨시마켓과 마술회관이었던 ‘피넬 홀’까지 아우른다. 특히 18세기 농산물과 식료품을 판매했던 컨시마켓의 ‘빈신’은 가히 놀랄 만하다. 대규모 소품들이 밀려들면서 도시개발 업체들에 의해 철거될 위기를 맞았지만 ‘시간의 흔적’을 지키자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기사화됐다.

문화 광주의 ‘봄날’은 온다

어느 대도시의 소핑단지와 다른 점은 지역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의 아티스틱 스팩이 개 들어서 있고 다양한 로컬푸드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연중 컨시마켓과 피넬 홀 앞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공연과 마술쇼, 버스킹(길거리 공연) 등의 ‘피넬 홀 & 컨시마켓 플레

이스 페스티벌’은 매년 전 세계에서 1900만 명이 다녀가는 글로벌 축제로 자리 잡았다.

바야흐로 3월이다. 봄의 길목에 들어선 광주는 요즘 역동적인 문화 융성의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문화전당과 전당 인근 명소를 활성화시키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는가 하면 5·18 민주화운동 역사의 현장 27곳을 잇는 ‘오월길’ 조성 사업에 들어갔다. 전당 주변 황석과 중에는 근대유산의 보고(寶庫)인 양림동 역사문화마을과 문화전당 및 남광주야시장을 하나의 벨트로 묶는 사업이 눈에 띈다. 예술의 거리와 금남로 주변을 문화광장으로 꾸미는 ‘문화전당 프린지 페스티벌’도 있다. ‘견고 싶은 오월길’ 조성 사업은 총 2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5·18 민주화운동역사의 사거려 있는 사적지들을 5개 코스로 나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장밋빛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으려면 ‘지역의 공유’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그것은 양림동의 가치와 오월길의 의미 등을 알리는 ‘과거의 재발견’이기도 하다. 그렇게 해서 오랜 세월 광주의 삶과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해 온 공간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내 함께 나누는 스토리텔링이 동반될 때 문화 광주의 ‘봄날’도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jhpark@kwangju.co.kr

社說

또 멈춘 한빛원전, 정기점검 제대로 했나

최근 한빛원전 1호기의 가동이 갑자기 중단되는 사고가 있었다. 30년간 사용해 온 고구 소재의 이음관이 파손돼 사고가 났다고 한다. 지난해 한빛원전 2·3·4호기의 빈번한 가동 중단 사고에 이어 올해 1호기 사고까지 이어져 대형 원전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 27일 한빛 1호기의 복수기와 터빈을 연결하는 이음관이 파손돼 외부 공기가 유입됨으로써 진공상태 유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가동 중단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수원 측은 문제가 된 부품 교체 주기는 따로 없지만 노후화로 인해 파손돼 부분 정비보다는 이음관 전체를 교체기로 방침을 세웠다.

원전 측의 설명대로라면 일단 안전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영광 한빛원전 2호기 화재와 10월 한빛원전 3·4호기 증기발생기 안정성 검토 부실 의혹 제기 등 그

동안 한빛원전에서는 크고 작은 불시 고장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파손된 부품은 15~18개월 주기로 진행되는 전방기관 정기점검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사고가 난 것은 부실한 품질 관리와 정기 점검 등이 형식적으로 이뤄졌지 않느냐는 의혹을 갖게 한다.

전문가들은 원전의 수명만큼 해당 부품과 설비가 제대로 작동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정기점검을 주도면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과 규제기관이 정기점검을 제대로 하면 불시 정지와 고장이 이처럼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원전 안전은 항상 ‘만에 하나’라는 가정하에 대비를 해야 한다. 원전에서는 단 한치의 실수나 오류도 곧바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과 규제기관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사생활 침해 우려 ‘전파법’ 정비 시급하다

광주 전파관리소의 사기도박단에 대한 불법 감청으로 불거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사고라지지 않고 있다. 관련 법규정이 모호해 공익 목적을 내세운다면 언제든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은 법원의 영장 없는 감청이나 검열을 제한하고 있는데 예외로 전파법에서는 ‘전파 감시’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 49조는 전파의 품질 측정, 혼신(混信)과 무허가 전파의 탐지 등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범조문이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 포괄적이라는 점이다.

범조계는 전파 감시 규정상 이상한 전파를 찾아내는 ‘탐지’와 어떤 주파수인지 알아보는 ‘측정’은 가능하지만 법원 허락을 받지 않고 대화 내용을 들어 보고 영상까지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광주·대전·강릉 전파관리소가 범법과 배치되는 예규 등으로 수년째 영상 없이 도박단의

영상 및 대화를 수집한 행위는 당연히 탈법이라는 판단이다. 여기에 전파법 위반과 감시 대상이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애매해 해석 과정에서 혼란을 부를 소지가 많다는 점도 지적된다.

지역 전파관리소의 상위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와 미래창조과학부도 ‘감청 없는 감청’이라고 불법을 시인했다. 관행적인 불법 감청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영장을 받아 실시하도록 감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모텔이나 화장실 등의 물레카메라 영상과 대화까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전파관리소의 장비가 첨단화됐나 구두 다짐만으로는 도무지 미덥지 않다.

당국은 전파법을 손질해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감시 대상과 탐지의 내용 및 절차 등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범조문도 사례별로 간명하게 제시해 해석상 오해가 없도록 합과 동시에 직원 준법 교육을 강화해 다시는 불법 논란이 일어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은펜클럽

호남에선 자유경쟁, 비호남권에선 연대·협력을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교수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말을 빗대어 말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호남인의 피를 먹고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며 발전시킨 민주주의가 박근혜 정부에 의해 유신 시대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 기막힌 일이지만, 이런 반역사적 행위를 제지할 유능한 야당이 없는 것도 한탄스럽다. 호남인들이 많은 희생을 치르며 지지해 준 야당인데 말이다. 주어진 역할은 못하고, 희망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무조건 지지만 해달라는 야당, 한 마디로 짜증나는 집단이 아닐 수 없다.

광주를 흔히 민주화의 도시라고 말하지만 지역정치는 전국에서 가장 후진적이다. 전략적 선택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 호남인들이지만 정작 자신들이 뽑은 국회의

원들에 대해서는 불만투성이다. 왜 이런 모습만 현상이 일어나는가? 한 마디로 경쟁구도의 부재와 일당독주 때문이었다. 경쟁이 없다보니 당이 좋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고, 간혹 좋은 사람을 선출해도 현실에 안주하다가 2류 정치인으로 전락해버린곤 했다. 정권교체에 모든 것을 거는 ‘모 아니면 도’(all or nothing)식의 접근방식, 그리고 이런 심리를 악용한 중앙 정치권의 약탈적 행위로 지역발전을 후퇴시킨 배경 중 하나였다. 이제 이런 식의 선거는 그만 하고, 지역과 민주주의가 함께 발전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야권이 분열하였고, 신당이 출현하였으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분열 덕분에 호남에는 경쟁구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정체성에 있어서 더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모두 도무지 믿음이 안 간다. 더민주당은 국보위에 참여한 전두환 시대의 구 인물들 당 대표로 영입했고, 국민의당은 창당 준비위원장의 ‘이승만 국부’ 발언으로 흥역을 치른 바 있다. 민주진영에 얼마나 인물이 없었으면 이런 사람들을 대표감으로 영입했을까? 배신감이 느껴진다. 정당의 정책과 정치윤리가 어떻게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당을 보고 투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번 선거에서

는 철저하게 인물 중심으로 투표를 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야 시민주권과 호남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다.

신당 출현 후 두 야당이 호남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양당 모두 현역 정치인들을 대거 교체하고 뉴디들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좋은 일이다. 이제 비호남 지역정치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런데 한 가지, 현역정치인의 교체와 신인의 발굴에는 일정한 절차와 조화가 필요하다. 정체성, 의정활동, 지역에 대한 헌신 등을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유능한 현역 정치인들은 재선임하고, 수준 이하의 정치인들은 교체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신인들의 경우 시대정신에 투철하면서도 유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정치적 경향이 많은 전·현직 의원들이 절반 정도, 유능한 신인들이 절반 정도 당선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인물을 키우고 지역의 정치력을 증대시키는 방식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을 정치의 주체로 삼는 정치제도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대의제 민주주의, 경제적 자유를 핵심적 가치로 삼는 이데올로기이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새누리당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들의 사고는 유신과 전두환 시대

에 머물러 있으며,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란 오로지 경제적 자유에 토대를 둔 천민자본주의일 뿐이다. 한국 정치를 정상화하려면, 국토를 균형발전 시키려면, 남북화해와 통일을 도모하려면 이런 수구적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제3당의 출현은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함께 지니고 있다. 제3당이 바람직한 정책개편을 견인하고, 캐스팅 보트 역할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우선 특정정당의 과반 의석부터 지지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평화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한 엄중한 시기에 야권은 분열에 따른 미움을 극복하고 대승적 차원의 협력을 도모하라. 비호남권에서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의 진정성을 보여주라. 비호남권에서의 연대와 협력이 부정적인 정파들에 대해 호남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 거부운동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점을 유념하라. ‘호남에서는 자유경쟁, 비호남권에서는 연대·협력!’, 이것이 중앙정치와 호남정치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광주 미래 앞당기는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정길용 광주시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최근 국토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2100만 대에 육박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를 인구수로 환산하면 1대당 2.64명이다. 대낮에도 교통정체를 체감해야 하는 입장에서 ‘자동차가 왜 이렇게 많은가’ 하는 의구심 아닌 의심이 들 정도이다.

그러나 새삼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자동차는 어느새 선택이 아닌 필수 재화가 됐다.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며, 자동차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광주

와 자동차산업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 도시 조성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점검회의에서 올 2월까지 국가 노동정책과 관련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반영과 지역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 재구성을 요청받아 수계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은 완성차 100만대 생산이라는 수치보다는 100만대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점에 방점이 찍혀있다. 단순히 자동차 몇 십만 대를 늘리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매우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광주에 ‘기회’를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자동차산업벨트 조성 사업’은 적게는 4000억원에서 많게는 6000억원 이상

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프로젝트다. 이 사업의 성공은 정부의 국비 지원이라는 힘들텐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따라서 정부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친환경 미래형자동차 기술 및 생산 허브 구축을 위해 광주 자동차산업벨트 조성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

이른바 ‘자동차도시’로 일컬어지는 디트로이트시와 도요타시는 자동차산업의 흥망성쇠에 따라 운명을 달리하고 있으며, 중국이 새로운 자동차산업의 강자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다크호스로 상하이시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울산이 세계 최고의 자동차생산 도시로 중국 의 무교육 교과서 7학년(중학교 1학년) 상권 ‘역사와 사회’에 실렸다고도 한다.

아직 타당성 평가단계인 현실점에서 어쩌면 선부른 생각일 수 있겠지만 광주가 진정한 자동차메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들 자동차도시의 사례를 우선 살

펴보아야 할 것이다. 광주의 산업 생태계 지도를 바꿀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은 최대 현안인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국내 제조업 근간을 바꿀 수 있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아울러 광주가 미래형 전기차·수소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 생산 및 자동차 부품 생산 등 명실상부한 자동차 산업 도시로 거듭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광주의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혁명인 셈이다.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기아차와 자동차부품업체들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곳이며 광주의 미래 역시 자동차에 있다고 보고 이 분야에 모든 지역 역량과 관심을 쏟는다면 꿈은 현실이 될 것이다. 더불어 문화와 산업이 융성하고 풍요로운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져고 풀이 흐르는 광주를 기대해 본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만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한국과 관련된 첫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1948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UN 총회였다. 대한민국의 승인을 받아 합법 정부로 인정되느냐 마느냐 하는 운명의 자리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진영이 필리버스터 전술을 들고 나왔다. 입을 열면 세 시간은 기본이라는 소련의 의외장관 안드레이 비신스키와 한국 대표단 조병욱 박사 사이에 설전이 오갔다. 비신스키가 먼저 “저기, 미 제국주의와 이승만의 개가 앉아 있다”고 비난하자 조 박사가 “저기, 스탈린의 개가 있고 있다”고 받아쳤다.

15분간 욕설 같은 언설을 퍼붓던 비신스키가 갑자기 “어, 어”하며 목을 감쌌다. 그 틈을 타 한국대표단은 안건을 상정했다. 대한민국이 정식 국가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나중에 알려진 일이지만 비신스키가 갑자기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이유는 치통과 성대 결핵 때문이었다.

현정사상 첫 필리버스터 기록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갖고 있다. 조선 국회의원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1964년 5시간19분간 발언으로 동료인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을 무산시켜 일약 스탈린이 되었다.

1969년에는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3선 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간 발언을 했다. 테러방지법 저지를 내걸고 야당이 49년 만에 실행한 필리버스터를 8일 만에 끝내기로 했다.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필리버스터는 갖가지 기록과 화제를 낳았다. 정청래 의원이 개인 최장 기록(11시간 40분)을 경신했고 전 체로는 2011년 캐나다 새민주당의 58시간을 깨고 세계 최장 기록을 남겼다.

공천 배제 통보를 받은 강기정 의원은 ‘싸움닭’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었던 이고 있다”고 받아쳤다.

유를 말한 뒤 ‘입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목표에 출사표를 던진 서기호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현실적인 격차를 언급하며 눈물 불출마의사를 밝혔다.

필리버스터는 민생법안 처리를 거의 하지 못해 ‘식물 국회’로 불린 19대 국회가 남긴 또 하나의 유산으로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법안 저지를 위해 연단에 뛰어오르거나 몸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신사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될 것이다.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간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FAX 222-4938)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0195)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대표 FAX 222-4918) 문화미디어부 2200-664 (FAX 227-9500)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